

기고

한 선 근 보성 119안전센터 소방위



아파트,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에 만전을

지난 12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그 외 4명이 연기를 흡입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등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다수인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화재 중 아파트 및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평소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고 화재 시 초기대응이 미흡하게 되면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높게 된다.

특히, 화재사고 아파트 대부분이 상층부로 연소 확대가 쉬우며 연기확산에 의한 대피가 어렵고 화재전파를 막는 기능을 하는 발코니의 확장추세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소방차 전용 주차 황색선을 표시해 소방차량이 유사시 황색선 내에서 원활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아파트가 심각한 주차난 등으로 인해 일반차량이 황색선내에 차량

을 주차시키고 있어 유사시 소방차량이 활동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자칫 대형피해 발생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에 방을 위해서 소방관서에서는 특별소방점검 및 주민안전교육, 소방출동로 확보 계도활동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방관서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

화재발생으로 5분 이상 경과 시 화재 연소 확산 속도는 급속하게 증가되므로 화재시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등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하여 초기진화 등에 주력해야 한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무리하게 불을 끄려다 목숨을 잃을 수 있으므로 '피난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파트단지내 소방출동로를 확보하는 한편, 가정에서 전기, 가스 등 화기취급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어린이 불장난 예방조치 강구, 소화기 유지관리 철저 및 적정위치 배치로 유사시를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겠다.

아울러,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에는 단독형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 초동대처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주부들이 가스레인지 위에 빨래 및 음식물 등을 올려놓고 잠시 외출할 사이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외출 시에는 반드시 가스 불을 차단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으로 안전한 주거공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자.

社說

드론공원 활성화 시켜야

광주시 북구 대촌동 광주시민의 숲 부근 하천부지에 위치한 드론 비행연습장에 1만340㎡ 규모의 드론공원이 조성된다니 기대가 크다.

시에 따르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의 저변 확대와 시민들의 레저활동을 위해 시는 이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북구와 함께 '드론공원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하천부지 내 드론비행이 가능한 레저·문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변경해 추진하게 됐다.

시는 시민들의 레저, 취미활동을 위한 행·재정적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익산국토청은 하천부지 내 점용허가를, 광주 북구는 드론공원 조성 및 드론공원 활성화 및 운영을 맡게 된다.

드론비행연습장은 지난 5월부터 드론 교관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기사를 통해 기초체험반, 항공

활영반 등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주중에는 지역 내 드론 관련 기업들의 테스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향후 드론공원을 조경량 비행장치 상시 설치시험장으로서 지정받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 중이다. 상시 설치시험장으로 지정받으면 시민들이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해 전남 순천, 장흥 등 타지로 가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공원조성을 계기로 지역 전략산업인 드론산업 육성을 목표로 먼저 시민들이 드론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인프라로 드론공원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향후 시민의 숲 물놀이장, 야영장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드론공원이 드론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권침해방지 위해 최선을 다 하자

인권문제가 대두 되면서 경찰은 인권을 자유권위주로 개념을 정립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공권력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하지 않으면 된다는 소극적 인권개념의 인식으로 고문·가혹행위·폭행 등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적법절차 준수 수는 물론 범죄로부터의 보호, 사회적 약자보호, 인권실현 등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미흡할 경우 불만족이 발생하고 인권침해라고 느끼는 등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활동은 국민과의 괴리감을 좁히고 국민의 인권눈높이에 발맞추어 기존인권 의존적 내지, 보호단계에 그치고 있는 경찰활동을 인권실현의 단계까지 끌어 올려야 할 것이다.

인권 실현까지가 인권임무의 완성이라는 공감대 형성 및 인권진단 과정에서 발굴된 인권 취약요소 등을 바탕으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경찰관들의 인권의식 확립과 인권이 모든 경찰행정에 최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권이란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 보편성과 확장성을 그 특성으로 한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인권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청인권센터를 발족한지도 1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 우리경찰은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인권'에 대한 기존의 관행과 의식을 바꾸고 인권침해 발생가능성이 있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경찰의업무 특성상

법 집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시비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긴 적도 있었다.

경찰청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있는 만큼 행사함에 있어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최근에는 시민들의 인권의식의 향상에 따라 물리력의 행사나 폭언 이외에도 불심검문 등 법 집행과정상의 절차상 하자까지도 인권침해로 인식하고 있다.

수사부서 직원들과 일선에서 치안활동에 여념이 없는 지역경찰관들은 치안현장의 법 집행과정에서 예견되는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로 국민들에게 고품격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경찰상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주시관 /광산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장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평의료계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 00021 (일반)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 경 호
편집인·편집국장 강 서 원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세 (주)남도브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를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